

[www.peaceone.org](http://www.peaceone.org)

#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8년 3월 Vol.173

**정세** 3.6남북, 3.8북미 합의 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3.24 평화촛불을 준비하며**

**24차 운영위원 총회**

**현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조음한 우리의 입장

**기고**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회원마당 / 지역소식**

**회비와 후원금**





- 01 **정세** 3.6남북합의, 3.8북미합의 이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 고영대 공동대표에게 듣다. + 오혜란



- 08 **자료** 특사 방북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 10 **3.24 평화촛불** 평화 촛불의 함성을 준비하는 부산 사람들 + 강문수  
평화의 길에서 최대 수혜자는 아이들 +



- 14 **총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평화촛불을 결의한  
24차 운영위원 총회 + 오미정, 이기훈, 서종환  
2017년 사업 평가 보고 + 지희준  
2018년 사업 계획 + 김강연



- 22 **현안**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27 **기고**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 70주년 4·3항쟁을 맞으며 + 박찬식

- 30 **회원마당** 부산평통사 평화발자국, 제주에서 2단계 사업 첫 발 + 도라지  
1990년대 초 팀스피릿 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선순환을 돌아본다. + 이기훈

- 34 **소식** 광주 / 군산 / 나주 / 대구 / 대전 / 목포 / 성남용인 / 부산 / 부천 / 서울 / 인천

- 39 **감사합니다** 회비와 후원금(2월)

# '3.6 남북합의', '3.8 북미합의' 이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 - 고영대 공동대표에게 듣다.

3월 6일 남북합의에 이어 3월 8일 북미합의가 나왔다. 평창올림픽이 끝난 2월 말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공동대표인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평화누리통일누리 독자들을 위해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합의'를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전망을 서울 등에서 진행한 정세강연회 내용을 반영하여 대담형식으로 꾸며 보았다.

(정리 : 오혜란 집행위원장)

### 한반도 정세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한반도를 핵전쟁위기로 몰아넣었던 북미 핵 대결 상황을 짚어보자. 미국은 선제공격위협을 지속하며 선 비핵화 요구를 해왔다. 공공연하게 선제타격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코피전략이다. 코피전략에 반대하는 빅터 차를 낙마시켰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기 전날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를 단행(2. 24)하면서 이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2단계(고강도 해상봉쇄 등 군사행동)로 가야한다고 했다. 북한도 핵 무력완성을 선언(2017. 11. 23)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과 선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대화 하겠다(2017. 11. 30)”고 했다. 언제 어떻게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정도의 극단적 핵 대결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서 3.6남북합의가 나왔다. 전환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해서 '3.8 북미합의'가 이뤄졌다. 분노와 화염,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은 아주 잘할 것”,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극적인 반전이다.

## ‘3.6 남북합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첫째, 1항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민족통일의 염원을 과시하겠다는 뜻이다. 정상간 핫라인 설치는 우발충돌과 확전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3항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천명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안전이 담보된다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건부다. 미국보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다. 셋째, 4항에서 북미대화 용의를 표명했다.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북한 김영철이 2월말에 평창에 왔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걸 철회한다는 뜻이다. 넷째, 핵미사일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남북, 북미대화를 이어갈 모멘텀을 제공한 거다. 북한은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함으로써 한미가 4월 군사연습에 핵잠수함,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미 전략자산을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한미 군사연습은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성의 징표이기 때문에 대화 동력을 살려가려면 최소한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 대북공세성을 제거하고 규모와 기간도 축소해야 한다.

## ‘3.6 남북합의’ 이틀 뒤에 ‘3.8 북미합의’가 나왔다. 엄청난 속도다.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다. ‘3.8 북미합의’ 다음날 백악관 대변인이 “북의 구체적 조치와 행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3월 10일 “북한과 합의가 정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폼페이오도 북미대화를 위한 “추가적 조건은 없다(3.11)”고 했다.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하면서 참모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한미군사연습을 양해했다. 이외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신뢰구축에 관한 내용이고 매우 포괄적이라고 한다. 북한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미국이 제공할 반대급부가 뭐냐?’가 문제다. 현재로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 경제 지원, 대북 제재와 압박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북미수교)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미 정상회담 성공할까?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 미국이 반대급부로 무엇

을 줄 것인가에 달려있다. 사실 북한이 벼랑 끝까지 가면서 체제 불안을 감수하면서 핵을 개발했는데 쉽게 포기하겠나. 북한의 핵 폐기는 결국 미국이 무엇을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핵심은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평화협정이다. 북이 핵개발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2006년 10월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는데 2007년 4월에 미 애틀란티카운실은 북한의 핵 개발 원인은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도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을 갖게 됐다”(2013년 4월 1일 북한 핵보유법령)고 했다. 북이 핵을 갖게 된 원인을 해결해 주면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그것을 평화협정에서 담보해주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 문제는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 의지인데?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 주장에 동조한다. 빨갱이다’고 하는데 평화협정은 북한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이 정전협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국제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이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는 “3개월 내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해서 외국군 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1954년 4월 26일~6월 15일까지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려서 외국군 철수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4자회담이 열렸지만 역시 미군 철수 문제를 회담의 제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회담이 결렬됐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북한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나온 ‘북미 공동 코뮤니케’(2000. 10. 12)에서는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의 여러 방도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가 나오자 북한은 이제 서야 미국이 움직인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기대됐던 북미정상회담은 클린턴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조건에다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시가 반대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개시”와 함께 2007년 10.4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 추진”에 합의했다. 6자 회담이 막바지로 치달던 2008년에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는 “2008년 내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부시대통령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냉전의 고도인 한반도에서 냉전 해체를 알리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거보를 내딛은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론 진보진영조차 이 역사적 계기를 그 의미도 깨

닫지 못한 채 넘어갔다. 유일하게 평통사만 평화협정(안)을 만들고 평화협정 실현운동에 나섰지만 결국 그 계기를 살리지 못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평화협정은 짚 수 없다. 당시 깨어있는 시민들이 평통사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그 후 10년 만에 역사적 기회를 다시 맞고 있는 것이다.

##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차가 클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미 국무부에서 일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특별팀을 지휘했고, 이명박 정부시절 주한 미대사를 지낸 스티븐슨은 “평화협정이든, 조약이든, 체제든 한미동맹은 항상 논의에서 열외되어야”(2009. 12. 3)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진보적 언론인으로 유명한 셸리그 해리슨에게 핵폐기 전제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남한에 제공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를 제시(2009. 2)했었다. 결국 쟁점은 한미동맹인데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을 위해 체결하는 평화협정과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

## 그렇다면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선에서 접점이 생길 수 있나?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2017. 7. 6)에서 비핵화 5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다. 1)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 2) 남한에 있는 핵무기와 기지 철폐하고 검증 3) 미국의 핵타격수단을 전개하지 않겠다는 담보 4) 핵 공격 위협 중단, 핵 불사용 약속 5) 남한에서 미군 철수 선포가 그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당연한 것이고 셋째와 넷째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공약했던 것이다. 제네바 합의 3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 한다”는 구절이다. 9.19 공동성명 1항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다섯 번째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철수 선포’만 해도 비핵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면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담보하라고 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핵능력 동결에 합의하고 나아가 평화

협정, 수교, 불가침과 핵전력 폐기를 맞바꾼다면 협상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큰 틀에 합의한다 해도 실무과정에서 엄청난 난관과 장애에 부딪혀 협상이 파탄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남북의 신뢰와 민족 단합이 더 없이 중요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보다 나은 동맹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자주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역사적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한반도 핵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기준은 핵무기 철폐라는 인류 공동의 염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결정적 장애물(핵 대결) 제거, 한반도 민중 복지 실현이라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핵무기금지조약 체결을 이룬 공로로 국제핵무기 철폐운동(ICAN)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원폭피해자인 세스코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로 조카의 몸이 녹아내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핵무기와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 핵무기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 악”이라고 증언한다.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오픈 하우스는 핵의 파괴적 결과를 목도하고 “이제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도다”라는 인도 힌두경전을 인용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했다. 핵무기 개발을 루즈벨트에게 제안했던 아인슈타인도 뒤늦게 핵무기 폐기를 요구했다.

소련 붕괴는 당시 석유 값 폭락과 관료주의가 주요 요인이었지만 미국과의 핵 대결과 핵 군비 경쟁이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하다. 한반도 핵 대결은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70년 넘게 남북 분단을 지속시켜 온 정치, 군사, 체제 대결을 연장,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핵 대결은 남한의 대미 종속을 가중시키고 주변국의 간섭을 확장하며 분단 고착 정책을 펴도록 한다. 핵 대결은 한반도 평화를 질식시킨다. 핵 대결은 남한 민중들의 대북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킴으로써 민족대단결에 명박산성을 쌓게 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안되는데 통일이 되겠나.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썼는데, 핵 대결로 남한이 지출할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체계) 구축 비용이 57조원에 이른다. 올해 3축체계 예산만 해도 4조 3천억 원이다. 북한도 핵무력 건설에는 강력한 최첨단 기술 역량과 막대한 자금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핵무력 건설과 경제성장, 인민생활의 향상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2017. 2 정부 비망록). 우리가 이 길(핵대결)을 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이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길

이고 남북 당국과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측 대중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며, 민족대단결을 이루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담보해 줌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는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하지 않겠나.

## 북이 한미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했다. 어떻게 보나?

한미군사연습은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적 성격을 현실로 증명한다.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한미군사연습에 30만 명이 참가하는데 이걸 전쟁할 때 동원되는 숫자다. 대북 적대정책의 뚜렷한 표징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훈련이 시작되면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곤 했다. 북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나. 그런데도 이해한다고 한 것은 대화와 협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모조리 우회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북이 전략적 발상을 전환했다고 보나?


개인적 의견인데 그런 가능성도 있다. 단순 추정은 아니고 한 10년간의 북한 주장을 쫓 체크해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이 작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미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다른 형태로 재정 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이 지역에서 전략적 지위를 향상시킬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아사히 신문은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폐기는 절대 없다.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라, 그 전제 하에서 평화통일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룬다”(2017. 7. 19)는 지령을 재외 공관에 내렸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 지침이 사실이라면 핵 폐기는 남북, 북미 합의에서 이미 북한이 입장을 밝혔기에, 북한의 구상은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논의가 된다면, 남북은 곧장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로 내려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의 주역이 되시라”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다지고 다음 정권이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2월 말에 내려왔던 김영철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대화한다고 했는데도 ‘3.6 남북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다. 극적인 입장 전환이다. 북한은 특사단에게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북한은 소위 핵무기 값을 최대한 낮추면서 한미동맹을 우회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북미 관계정상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것 같다.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체제안전을 담보하는 길은 결국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에서 담보하는 방식이다. 그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이걸 교과서적 경로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보면 교과서적인 평화협정이 아닌 종전선언 수준의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정도에서도 핵 폐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경로도 예상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판단이다. 이런 경로가 현실화될 경우도 상정해서 대비해야 한다.

## 진보진영 과제와 3.24 평화촛불의 의미는?

북한이 한미동맹을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더라도 남한 민중의 입장, 평화통일운동의 입장에서 여전히 자주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오히려 더 한미동맹 문제에 천착하고 대중과 함께 동맹폐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론, 정치, 실천적 방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진보운동의 과제다. 핵 대결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군사 대결적 방식, 핵 대결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핵 대결을 강화하면 적대감과 동맹이 강화된다. 분단지속과 절망의 길이다. 냉전해체와 평화실현, 그리고 분단극복과 통일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대화와 협상으로 미국의 적대정책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치적 대의를 앞세운 평화적 방식만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남한 평화민중세력과 민족의 대단결로 국제적 여론을 조성해 동맹의 호전적 정책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 3.6남북합의와 3.8북미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의 공고한 구축과 자주통일로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적폐정권을 무너뜨린 그 촛불을 이제 냉전과 분단적폐를 무너뜨리는 촛불로 이어가야 한다. 3.24평화촛불은 그 첫걸음이다. 남북미 당국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합의를 이행하도록 때로는 뒷받침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촛불이 수행해야 한다. 

## 〈특사 방북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 의지를 밝힌 ‘3·6 남북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1. 먼저 우리는 남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는 대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남북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한 합의도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전면 핵전쟁의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현재의 극단적인 군사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정상회담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 북 최고 지도자의 최초 남한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거나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2. 다음으로 우리는 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점을 크게 환영한다. 이는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이 핵을 갖게 된 원인인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해 주면 된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지극히 당위적이고 유일무이한 길을 재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법적, 제도적으로 담보해 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진정성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다음으로 우리는 북이 비핵화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동안 북미대화에 나서지 않았던 북이 적극적인 북미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

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3·6 남북합의’에서 북은 대화 기간 중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남북,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의미 있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대화의 시작과 모멘텀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풀고,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선제공격작전, 참수 작전 등 한미연합연습의 대북 공세성을 제거하고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북미대화 시작과 지속, 북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으로 북은 이번 ‘3·6 남북합의’를 통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는 북이 남에 우발충돌과 국지전,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남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5.** 이에 우리는 이번 ‘3·6 남북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남북미 당국이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결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편으로 뒷받침하고 한편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서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을 촉구하는 3·24 평화촛불을 높이 들 것이다. 

2018. 3. 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 3.24 평화 촛불의 함성을 준비하는 부산 사람들

강문수 부산평통사 대표

부산평통사는 일상적인 활동을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학습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실천에 나섰습니다. 생활을 책임지느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도우며 배려하며, 평통사에 주어진 짐을 나누어 맡는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회원들과 함께 이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3.24 촛불은, 그 제안을 받고 잠시 고민한 순간, “이거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기 위해 어른아이 모두 거리로 나온 것은 그 사안의 절박성, 심각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노의 힘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싶지 않다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의 분출이었습니다.

우리도 평화 의제를 갖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핵대결의 위기는 너무나 절박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과 멀어보일 수 있는 평화는 지켜지지 않을 때 전쟁의 극단으로 재앙을 부를수 있기에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촛불이 필요한 거죠.

총회를 준비하면서 진행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한 중앙과의 간담회,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촛불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중앙 총회 전에 이미 부산평통사는, 중앙에서 제안받은 50명 이상은 해야 한다고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았고, 회원 중심으로 버스 한 대, 지역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로 다른 버스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해보자고 결의했습니다.

회원들을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버스 한 대를 책임져 보자고 마음을 모았고, 이번 부산 총회에서 3.24 촛불의 의미를 소개하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3월 6일 지역 단체와 정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서 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을 해나가야 하는지 알리고 3.24 촛불


동참의 필요성을 소개했습니다. 이 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평통사가 소개한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이 모임을 계기로 3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3.24 촛불 참가 호소 기자회견이 부산에서도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11일 총회까지 3.24 신청자는 47명이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땀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에 3.6 남북합의과 3.8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자주평화, 통일의 역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을 주장해온 평통사의 방침이 과학적이고 정당했음을 이토록 실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3월 24일 촛불은 단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를 뛰어넘어 자주와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탄탄하게 만드는 국민적 힘을 모으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크고 더 힘차게 개최되어야 합니다.

3.8 직후에 열린 부산평통사 총회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달려온 우리 모두의 힘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데 쏟아내자”고 결의했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3월 24일 모두 광화문으로 달려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 지인들의 손을 잡고 광화문에 모여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분단의 역사를 갈아엎는 새 역사를 써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부산평통사에서 3.24 촛불의 의미는 우선 이제 갓 운영위원이 된 핵심회원들의 실천력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평통사 방침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조직화대에 나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산평통사는 지역에서 건강하고 새로운 연대의 경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산 평통사를 부산시민들에게 믿을만한, 자랑스러운 평화통일단체로 각인시켜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평화의 길에 최대 수혜자는 아이들

## – 3.24 평화촛불을 준비하는 문상이 선생님을 만나

교육공동체 숲나가 3.24 평화촛불에 참여하기로 한 후, 문상이 교장선생님께 3.24 촛불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정리 : 이주은 청년팀장)

안녕하세요. 일단, 어떤 계기로 3.24 평화 촛불에 학생들과 함께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교육공동체 숲나(숲나-플레10년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는 ‘진리 안에 스스로 서서 인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운다.’입니다. 교육이 곧 성공 수단으로 전락한 이 시대에 인문고전교육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과 밖의 공부만 만날 수 있도록 역사와 사회 문제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작년 북핵 실험과 사드배치 등으로 시계 제로의 동아시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장이 시작되어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평통사를 통해 3월 24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피상적일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평화 촛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좋은 계기로, 평화의 길을 여는 주체와 수혜자는 곧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학생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화는 어떻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은 큰 이슈에 민감하지 않고 개인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직접 경험한 어른들에게 듣지도 못한 세대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난 것, 2000년대 초반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책에 나오는 단순한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준전시상태를 피로감으로 느끼지 위기감으로 느끼고 있진 않습니다. 때문에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고 통일이 이 땅에 본질적인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섭 안하고 남남처럼, 단순한 외국처럼 남북이 살아가면 안되냐고 말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고, 남북, 북미간 대결이 참여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감정 상태에서 통일 의식도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는데요. 학생들에게 통일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실제 관련 연구를 하기도 했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막연하게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적대감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당연시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생각은 지금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통일 대박론 또한 대상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기에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통일의 중요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고 무엇보다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이번 3.24 평화 촛불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먼저 학생들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평통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고, 그를 통해 2017년에 ICAN이라는 단체 주도하에 유엔 핵무기 금지조약을 채택했지만 기존 핵보유국과 남북한, 일본 등은 불참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디베이트 수업을 준비하면서 더 깊은 문제의식과 생각으로 확장해나가고 가족, 이웃들과 생각을 공유해 가면서 앞으로 평화와 통일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세대로서 대안과 삶까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후 학생들의 생각을 담은 내용으로 핵무기 금지조약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라는 서한을 작성해 유엔과 당사국들에게 보내고 한글, 영어, 중국어로 서한을 낭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유하려고 합니다.

3월 24일 평화 촛불 이전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평화 촛불 당일 피켓팅과 풍물, 플래시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 촛불 이후에도 평화동아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런 행동들이 학생들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변화의 단초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평화촛불을 결의한 24차 운영위원 총회

평통사 24차 운영위원 총회가 3월 3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용산 철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울동과 촛불 퍼포먼스로 힘차게 시작한 총회는 재적 254명 중 참석 148명 위임 7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체는 168명 참가)

문규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내년이면 3.1 운동 100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공동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우리 모두의 꿈이다. 또다시 핵전쟁, 대결상태로 갈 수 없다.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 3.24 촛불을 제안한 이유다. 평화촛불을 성사시키자. 조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창립 25주년인 내년부터 제2의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일구자”고 하였습니다. 문규현 대표는 89년 분단선을 넘으며, 2009년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며, “너 어디에 있느냐?”, “너 누구냐?”고 자문했었다며 민중의 생존과 생명,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광열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신재훈 회원이 대독하였고, 서경혜 회원과 김건우 회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2017년 사업평가안과 결산안>, <임원 선출>, <지도위원, 자문변호사 추대>, <2018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이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평통사 활동영상(<https://youtu.be/RqDcuDBnSU8>) 상영에 이어 대구 김찬수 대표가 사드저지투쟁 특별 보고를 하였습니다. 김찬수 대표는 “평통사는 한마디로 ‘빡세다’며 투쟁도,



회의도,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빡세계’ 한다.”면서 2017년 평통사가 집중했던 사드저지투쟁에 대해 “원 없이 싸웠다. 결국 사드가 배치되고 말았지만, 그 과정에서 평통사가 국민들에게 사드의 문제점을 알려냈고, 주민들에게 신뢰 받으며 현장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홍씨마당도 소성리에서 했다. 또 투쟁 과정에서 평통사가 부족했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핵심 고리인 사드를 철거하는 투쟁을 2018년에도 매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광주 지희준 운영위원이 사업평가안과 결산안을 소개했습니다. 운영위원 총회위원들은 제안된 평가안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승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소성리 현장투쟁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헌신했던 대구평통사 회원들이 회원상을 받고 같이 축하했습니다. 소성리, 성주, 김천, 원불교와 평통사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준 대구 회원들에게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했습니다. 대구 회원들은 모두 무대에 올라 회원상 수상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전국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중앙운영위원과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선출과 지도위원과 자문변호사 추대안도 모두의 동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오혜란 신임 집행위원장이 참가자 소개를 하고 몇 분의 발언도 들었습니다.

1986년 “반전 반핵 양키 고희”, “미제의 핵 기지화 반대”, “미국 용병 전방입소 반대” 등을 외치며 산화해 간 김세진 열사의 부모님이 참가했습니다. 신임 지도위원으로 추대된 열사의 어머니 김순정 여사는 “32년 전 반전반핵은 매우 생소한 구호였다.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이 무르익어 가는 것은 평통사 회원들의 선도적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문규현 신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온 힘을 다해 열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역시 신임 지도위원으로 추대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실현의 길에 노동자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자리지만 지도위원을 수락하게 되었다. 현장에 복귀한 철도노동자로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를 타고 가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일을 꿈꾸는 철도 기관사로 일하는 김영훈 지도위원의 환한 모습에 회원들도 기쁘게 축하했습니다.



사드철회투쟁에서 소성리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온 김천 노곡리 박태정 이장이 연대사를 했습니다. “사드 뽑는 날까지 주민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 사드도 핵무기도 없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다. 북핵 명분으로 사드가 배치됐으니, 남북-북미대화가 잘 되어 사드가 철거될 수 있는 평화정세가 되도록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김천 회원들도 같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문규현 상임대표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평통사도 참여하고 있는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운영위원은 제주 4.3항쟁 70주년 행사 - 특별법 제정,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일, 4.3의 이름을 찾는 일 등을 소개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2018년 정세 전망을 담은 영상(<https://youtu.be/bNgo-AX1xXc>)을 본 후에 김강연 신임 사무처장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평화통일연구소 전 소장 강정구 교수는 3.24 촛불 의미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강정구 교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과 생명이다. 이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이 전쟁이고, 그중에서 핵전쟁이다. 미국이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 의도적인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각 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에 의한 전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평화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평통사가 평화 촛불에 점화를 해야 한다. 그런 역사적 과업을 평통사가 하자.”고 했습니다.

이어진 조별 토론에 앞서 전주 서은숙 운영위원이 전주의 사례를 들어 “3.24 촛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상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 주말 아침 일찍 등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회지 읽기 모임’을 해보자. 한 사람이 한 쪽지씩 읽되 돌아가면서 낭독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낮은 단계의 실천들도 시도해 보자. 출근길이나 운동가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스티커 붙이기가 좋다. 회원들이 모여 같이 피켓도 만들고 홍보활동도 하면 재미도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끌 수 있다. 이런 일상활동들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는 것도 병행하면 더 좋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일상적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서은숙 운영위원은 “3.24 평화촛불집회를 더욱 재미있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이나 회원들의 개성에 맞는 여러가지 활동을 재미있게 해보자는 제안을 이번 총회에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20개로 나뉜 조별 토론은 아래의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이후 고영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조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전체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조에서는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병행과 이를 위한 실천 과정에서 3.24 촛불의 의미는? 2. 이(1)를 잘 이행하기 위한 공부, 홍보, 조직 등 일상 활동의 강화 방안은? 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하였습니다. 조별 발표와 전체 토론시간에 고영대 공동대표는 평화협정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평화협정의 핵심은 대북적대정책(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을 담는 거다.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북한도 핵을 폐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협정을 실현하는 것은 통일의 원칙 중 하나인 자주를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을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전세계 비핵화로 연동시키면 그만큼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과제가 될 것이고, 주체적 측면에서도 전세계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그것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희망이 되는 길이고, 우리 민중들의 미래도 희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영대 공동대표는 핵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 존 보로(평화운동가)는 ‘짧은 기간으로 보면 핵대결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게 0%지만, 기간을 길게 보면 핵대결이 전쟁으로 가는 것은 100%다’라고 얘기했다. 한반도 핵대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핵전쟁으로 가는 것은 필연이라는 의미다. 이것을 막기 위한 힘은 남북미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세력에 있고, 민중들에게 있다. 군사적 방법, 즉 핵대결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정권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의 길이다. 3.24 평화촛불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업제안과 조별토론, 전체토론을 마치고 2018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기념사진을 찍고, 3.24 평화 촛불로 모여달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고 서울로 와서 4시간 30분 동안의 총회에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 오미정, 이기훈, 사진 : 서중환)



안녕하십니까? 광주평통사 지희준입니다.

## 2017년 사업 평가를 보고하겠습니다.

2017년 정세는 촛불혁명에 의한 적폐정권의 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 사드배치를 고리로 한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기도, 그리고 미국의 초공세적 대북 강경책과 북핵 미사일 실험의 격렬한 충돌이 겹쳤던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사드철회를 고리로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저지하고, 격화된 핵 대결과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평통사와 진보진영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평통사는 2017년 총회에서 '조직 확대 강화로 한미일 통합 BMD(탄도미사일방어구상)와 군사동맹 구축을 저지하자' 는

가치를 내걸고, '혁신을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사드배치·한미일 동맹 저지로 평화와 통일의 새날을 열자'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평통사가 대중을 투쟁으로 일으켜 세우고, 여론의 호응 속에 투쟁할 수 있게 하는 정치 방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2017년 평통사는 -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의 허구성과 함께 주한미군 사드배치의 불법성 문제를 전면 제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드는 근본에서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주, 김천, 원불교 연대자들이 혁신을 갖고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드가 한미일 동맹 구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제기하여 한미동맹 폐기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높여내는데 기여했습니다.

2017년 평통사는 한반도의 핵대결과 전쟁위기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군사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의 동시 중단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한미정상회담(6. 24)에 즈음한 일간지에 전면광고, 청와대 앞 1인 시위, 국내외 서명운동, 기자회견, 피켓팅, 집회,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이것만은 알자」라는 홍보물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렇듯 평통사 입장은, 대중과 함께 한반도 핵 대결을 막아내고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할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평통사는 국방개혁에 관한 입장 발표,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 제출, 무기도입 반대 활동 등 국방개혁과 군축분야에서 사실상 국내 유일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트럼프 시대, 방위비 분담금 바로 알기」 책자를 발간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과 한미동맹의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데 기여했습니다.

평통사는 지난해 말, 6년에 걸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법정투쟁을 통해 9명의 피고인 전원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한미연합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쟁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 평통사는, 사드철회, 평화정세 조성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여론화 하는데도 큰 힘을 쏟았습니다.

35차 소성리 수외 집회로 개최된 7.26 평화홀씨 마당은 중단 대표들을 포함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완성도 높게 전달하였던 행사였고, 이를 통해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정치 집회를 부담스러워하는 보수적인 교도조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주장을 무리 없이 받아들였다.”는 원불교 교무의 소감은 평화홀씨마당이 거둔 성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드철회 마중물 고 조영삼 열사 49재와 삼보일배 투쟁으로 진행된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에서 평통사는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를 가져본 소송을 통해 무력화하면서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등과 함께 대중적인 방식을 통해 전쟁반대, 조건 없는 대화, 사드철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 저지 요구를 호소력있게 전달했습니다.

평통사는 독자적 실천과 함께 사드저지전국행동, 8.15통일대회, 트럼프 방한반대 투쟁 등과 관련하여 시민 민중진영의 공동행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시기 핵과 동맹문제가 연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조건에서 평통사는 고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시민, 민중진영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행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평통사의 조직역량은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통사의 실천이 유의미하게 되려면, 더불어 대중적 파급력을 갖고 언론의 조명을 받아 여론을 선도하려면, 최소 200~300명의 실천역량을 갖추고, 수천 규모의 집회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3년 재창립 이래 처음으로 회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회원수가 242명이나 줄었습니다. 22개 지역 평통사와 회원모임 중에서, 대 시민 캠페인에 5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갖추었거나 갖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5개 지역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부와 실천, 회의와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절반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에 조직정비특별방침을 정해 과도한 조직 형식을 벗고, 조직과 실천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의 성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평통사의 정체성이 확고한 골간과 열성회원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한미동맹 폐기,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국방예산 삭감과 평화군축 등을 평통사의 정체성으로 정립한 것은 조직 정비와 강화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했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정책적 성과와 실천의 성과를 계승하고 조직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와 실천을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열성회원을 발굴하고 조직의 재생산 토대를 마련하며 실천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대표와 운영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적극 나선다면 평통사의 실천·조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나 같이 조직 강화에 나서야만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치·정책적 측면에서는 사드저지 투쟁과 한미일 MD와 동맹저지투쟁을 내용적으로 이끌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사드저지 투쟁에 앞장서고 7.27평화홍씨마당을 의미있게 치러낸 반면, 더 규모있고 위력적인 투쟁을 일구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회원수가 처음으로 축소되고 지역조직을 현실하게 세워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cms 자동이체 회비납부회원 2,700명, 회비납부율 75% 입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올해도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드저지 비상행동, 7.26 평화홍씨마당 등에 공동사업 기금을 모아주셔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실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의 급여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회원 확대로 회비규모를 늘려야 하고 회비 납부율도 높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2017년 세부 결산 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임 사무처장 김강연입니다.

## 2018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결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매우 큼니다. 3월 25일 이후 한미연합 연습이 재개되면 대화는 유실되고, 작년보다 더 큰 핵 대결과 전쟁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결은 핵전쟁을 불러오고 핵전쟁은 민족공멸입니다.

대화나 대결이나, 살얼음판 같은 정세속에서 평화와 통일 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미군사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3.24 평화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핵대결과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촛불광장으로 모아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강화속에 북미 핵대결이 격화되고 이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과 핵군비증강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핵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들입니다. 과연 핵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핵대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병행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없는 세상을 향한 인류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길이고, 남북 민중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존 진보진영을 넘어 종교계, 노동, 청년 등 각계 각층을 모아내야 합니다. 최우선적 과제는 3.24 평화촛불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3.24 평화촛불에 평통사는 500명의 회원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밑불이 되고 각계 각층을 모아 3,000명의 평화촛불을 반드시 성사시켜냅니다. 이 촛불을 제2, 제3의 평화촛불로 키워내고, 7.27평화홀씨 마당에 수 천명이 참여하는 자주 평화의 촛불을 모아내도록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의 평화협정 실현 운동을 준비해 나갑시다.

평통사가 동맹폐기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올해도 사드 철거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사드는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핵심고리입니다. 사드를 철거해야 동맹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사드부지 공사 재개가 예상됩니다. 평통사는 소성리 지킴이 활동과 현장투쟁을 지속하고 주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에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3월부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방위비분담금을 고리로 한미 동맹의 폐해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자 민중이 방위비분담 폐기에 나설 수 있도록 최저임금 재원, 비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와 결합시킨 대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북대결을 추구하고 왜곡된 안보논리를 확산하는 군에 대한 전면적 개혁 없이 평화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군 기득권을 허물기 위해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삭감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매우 어렵습니다. 조직의 기동인 열성회원도 극소수이고, 실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수도 매우 저조합니다. 3.24평화촛불, 7.27평화흙씨마당에 수 천명을 조직 할 수 있을까?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산이 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내용이 있고, 헌신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하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2008년 1차 평화협정 운동 당시, 1,000명 회원이 성당, 교회, 노조, 풀뿌리 조직을 발품을 팔아가며 4만여 명의 평화협정 서명을 모아내고 회원도 700명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은 3,000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대표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세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방향을 모아내고 실천으로 이끌어 나갈 곳은 평통사 말고는 없습니다.

먼저 평통사 조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실천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통사 조직의 기동인 열성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열성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평통사의 정체성-정치정책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확고히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역에 열성회원 공부모임, 회지읽기 모임을 추진해 주십시오.

운영위원들이 교육, 홍보, 실천 등 역할을 나눠 맡아 일상활동을 강화합니다. 대중적 실천을 위해 각 지역별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2~3개의 실천팀을 꾸려주십시오. SNS, 영상 등 대중적 홍보를 위해 각 지역에 홍보위원을 세워주십시오, 중앙에서 홍보위원 모임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종교인, 노동, 교사, 청년 회원들 속에서 새로운 열성회원을 찾고, 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인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 평화동아리 모임 조직을 통해 청년회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과 촛불에게 있습니다. 평통사 조직을 강화하고 대중을 자주평화의 촛불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갑시다! 촛불을 핵보다 강하다! 우리가 촛불이 됩시다!

## 3월 3일 총회가 끝난 후.

3월 6일 남북합의에 이어 3월 8일에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의 전격적 합의로 경천동지 할 일이 벌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자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번 3.6 남북합의로 평통사가 2008년부터 주장하고 실천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병행의 필연성과 현실타당성' 이 입증되었습니다. 남북, 북미 합의 후 전국의 많은 회원들이 '역시 평통사 입장이 옳았구나'며 평통사 입장에 확신과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평통사가 제안하여 추진되고 있는 '3.24 평화촛불' 참가단체들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을 행사 기조에 반영하여 함께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70여 년 동안의 분단과 정전체제 속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불신과 대결이 켜켜이 쌓여온 상황이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도달하기 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촛불혁명을 일궈온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겠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앞장서서, 첫 출발이 되는 3.24 평화촛불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제2의 제3의 자주, 평화 촛불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1차 협상에 앞서 평통사는 2월 27일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3월 5일에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이재웅 협상 부대표를 면담하여 평통사 의견서를 전달하고, 3월 7일에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3월 7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린 첫 회의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전체 액수,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 한미간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외교부 당국자의 표현대로 “양측 모두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하니, 협상의 내용은 애초부터 불법이고 불평등한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평통사 및 시민사회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월 둘째 주에 2차 협상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니,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대응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3월 7일에 있었던 시민사회 기자회견 입장을 싣는다. - 편집자 주

##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차 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7~9일 하와이에서 열린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에 당당히 맞서 불평등과 불법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전망 하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이끌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어긋난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시적인 협정이고 주한미군 운영비의 일부 영역에 국한해 적용되는 제한적 협정이므로 임시적 조치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특별협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반협정인 한미SOFA 제5조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한미 간 분담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한국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장기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그 임무가 한국 방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어디든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대북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 무상 제공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한미동맹 유지에 따라 동맹국(한국)이 치러야 할 당연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도 잘못이다.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관한 특별조치협정(SMA)까지 맺으면서 미국에게 미





군주둔경비를 현금 지원하는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과 일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비분담을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잘못이다.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력이 크게 앞서지만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주둔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한미SOFA 규정에도 맞고 한미 간 형평성에도 부합하며 우리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협상단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궁극적으로 폐기한다는 전망 하에서 이번 10차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둘째, 미군 주둔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 협상 때마다 미군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흔들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주한미군기지는 주일미군기지와 함께 미국의 동북아시아전략의 중심적인 수행기지로서 중국이나 극동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자국(미국) 주둔보다 운영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본질적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므로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셋째,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의 40~5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65.1%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2010년 기준) 저평가된 토지임대료 평가를 정상화하고 누락되어 있는 미군기지이전비용과 미군 탄약 저

장관리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은 80% 가까운 부담을 하고 있다. 경제적 지불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많은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많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 넷째,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위해 군사건설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에 전용되었고 그것이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 총액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미국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체결된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의 많은 부분을 군사건설비로 배정했다. 그 결과 2001년 군사건설비의 액수와 비율이 1,041억 원/21.3%였는데 비해 2017년에는 4,250억 원/44.7%에 달한다. 액수로는 4배, 비율로는 2배 이상 폭증했다.

이 점에서 10차 협상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군사건설비의 전용을 불허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2018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쓸 소요도 없다. 군사건설비의 불법 전용 이전인 2001년(군사건설비 1,041억 원대)으로 되돌아간다면 군사건설비에서만 3,000억 원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

## 다섯째,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면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미군 전략 자산 전개비용, 사드 관련 비용, C4I 성능개량 비용, 주한미군가족주택 임대료 등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주한미군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사드 관련 비용은 사드가 대북 방어에는 소용없고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들여와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기지건설비나 운영유지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C4I 성능개량과 주한미군가족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항목들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되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법 전용의 온상이 되어온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금지원 규정도 전면 삭제해야 한다.

##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 환수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부인하던 미국은 물증이 제시되자 7년 만에 이를 인정했다. 불법 축적

된 방위비분담금을 관리하던 커뮤니티 은행이 민간 상업은행이라서 미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던 주장도 스스로 번복하여 ‘미 국방부 소속 은행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은 이제는 ‘전체 투자 잔고에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만 따로 산정하기 어렵다’거나, ‘이자소득을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투자 원금과 이자율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커뮤니티뱅크 운영비로 썼다하더라도 이 기관이 미 국방부 소유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미국 정부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국익과 주권 수호 차원에서 3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에 대한 불법과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전액 국고 환수해야 한다.

## **일곱째,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액 국고 환수하고 미집행액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현금(1조 1,193억원) 가운데 남아 있는 돈(2016년 12월 기준 3,331억원)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해야 한다. 2008년 이후의 축적된 자금도 확인하여 회수해야 하며 그러기 어렵다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 협정액과 예산액의 차액, 즉 감액분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모두 5,571억원인데, 이중 유효기간이 종료된 8차 특별협정 시기 발생한 감액분 3,035억원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줄 필요가 없다. 9차 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불용액은 주한미군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절약된 돈)이므로 주한미군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국회도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2017년 8월 23일 전체 국방위 회의)한만큼 불용액은 다시 미국에 주어서는 안 된다.

## **여덟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여 국회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전례없이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침해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월액, 불용액, 감액 등 2조원에 가까운 미집행액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난맥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국가재정법이 무력화되어 방위비분담금은 우리의 재정부권에서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이전처럼 2년으로 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아홉째, 협상단은 대미 굴욕적 자세를 벗어나 국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총액 규모였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정부가 막판 양보하면서 매번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한미동맹’이었다.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방위비 분담이 돈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어프로치(접근)한다는 점에서 협의·조정 의미가 적함”(연합뉴스, 2018. 2. 23)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구심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2017년 11월 8일)에서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관련 공평한 비용 분담이 바람직함을 인식”(acknowledged the desire for equitable cost sharing of USFK)했다는 부분 때문에 더욱 굳혀진다. ‘공평한 비용 분담’이란 그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을 요구하면서 내세워 왔던 논리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는 적폐정권으로 지탄받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협상단은 대미 굴욕적 태도에서 환골탈태하여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열째,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역사적 경험이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거버넌스(통치가 아닌 협치) 정신으로 시민사회단체, 국회, 언론 등과의 협력 속에서 미국과 당당히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협상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2018. 3. 7) 



#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 – 70주년 4·3항쟁을 맞으며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곧 제주4·3항쟁 70주년이 다가온다. 그러나 4·3은 역사 안에 고이 아직 잠들지 못하는 진행형의 사건이다. 3.1혁명이나 4.19혁명처럼 지나간 '역사'로 추모나 기념으로 그칠 수 없는 중요한 현실적, 운동적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70주년을 맞는 4·3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잘못되고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둘째는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합당한 조치, 셋째는 4·3을 우리 역사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제 이름을 붙이는 것(정명)이다.

### 4·3특별법 개정은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의 교두보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를 위한 첫번째 관문은 4·3특별법의 개정이다.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4·3범국민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반 년에 걸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12월 19일 오영훈 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기본성격을 진상조사법에서 피해구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했다. 정부가 맨홀 관리를 잘못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빠져 죽어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작위'에 의해 3만여 명을 죽이고도 배·보상을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제로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과거사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다 강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자에 대한 개별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상당수의 유족들이 사법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기도 했다. 4·3의 경우 대부분의 희생자 심사가 오래 전에 끝났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는 불가능하다. 사실을 인정한 때로부터 3년이 넘으면 배·보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입법을 통한 일괄 배·보상이 불가피하다.

4·3특별법 개정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내용은 군사재판의 무효화이다.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의 군사재판으로 2,500여 명이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부분은 한국전쟁 당시 즉결처분으로 희생되었다. 4·3평화공원에 묘역이 조성된 행방불명자 대부분이 이 수형인들이다. 수형인들 중 극히 일부는 한국전쟁 때 옥문이 열리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이 생존 수형인들 중 일부가 작년에 법원에 당시 군사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사법적으로 명예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군사재판 수형인들은 수형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수사기록이나 공소장은 물론 판결문조차 없기 때문이다. 사실판단이나 법리상 잘잘못을 따져볼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당시 수형인 대부분은 형식적인 재판조차도 없이 수용소에서 바로 형무소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형량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진상

조사보고서에서도 당시 군사재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수형인들과 그 유족들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겪었다. 토벌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우에는 그래도 억울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형인들은 단지 감옥에 갇혔었다는 이유로 '뭔가 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간 거 아니냐'는 낙인을 벗을 수 없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연좌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으면서도 가장 늦게까지 숨죽여 말도 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체조차 불분명한, 재판으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두 차례의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규정하여 수형인과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할 길을 열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도 중요하다. 2003년에 발간된 보고서는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대략적인 피해 규모 정도를 담은 총론적인 보고서에 불과하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다. 마을별 또는 사건별로 구체적인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산간 마을의 95%가 불태워졌고 상당수는 복구되지 못한 채 사라졌지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이후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조사되지 않았다. 연좌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다시 개시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사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당시 부모의 사망으로 친척 등의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의 정정,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도 포함하고 있다. 70년이 지났다. 당시 10세였던 유족은 지금 80세가 되었다. 생존피해자들과 1세대 유족 대부분에게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10주기다. 다 돌아가시기 전에 70년 맺힌 한을 풀 마지막 기회다.

#### 4·3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두 번째 과제는 미국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4·3항쟁은 미군정 하에서 발발했을 뿐 아니라 초기에 유격대 김달삼 사령관과 국방장관 김익렬 9연대장 사이의 협상으로 평화적인 해결의 가능성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익렬 9연대장을 해임하고 강경진압 작전을 채택함으로써 대량학살의 단초를 만든 것이 미군정이었다. 1948년 4·3 발발 직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되어 진압작전을 지휘·통솔한 브라운 대령의 “원인에는 흥미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는 발언은 이를 압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국 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1948년 가을 초토화 작전으로 시작된 무차별 대량학살에 대해서도 미국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나의 예로 1948년 12월 18일 미국 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한국 국방장관에게 “송요찬 연대장은




대단한 지휘력을 발휘하였다. 이런 사실이 신문과 방송, 대통령 성명에 의하여 일반에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은 보냈고, 이에 당시 채병덕 참모총장은 “귀하의 제안에 근거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할 것이다. 송 중령에게 적절한 훈장 수여할 것을 약속한다.” 고 답신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송요찬은 대량학살의 시발점이 된 포고령을 내렸던 당사자이다.

이렇게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미국은 70년이 흐르도록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듯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범국민위 등은 미국의 책임을 묻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에도 학술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책임을 공론화하는 활동이 있었고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 차원의 서명도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또는 일부 단체 중심으로만 진행돼 폭넓고 일관성 있게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유족회와 범국민위 등의 조직적인 결의로 추진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4·3 당시 제주도민 대량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 항쟁의 역사를 복원할 때

세 번째 과제는 4·3을 우리 역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4·3특별법과 그 법에 따른 진상 조사의 과정에서 4·3은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공식적인 진상조사와 제도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순히 법의 규정을 넘어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공식, 비공식적 서술을 규정했다. 물론 국가폭력에 의한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그것이 압도적인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희생의 객체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해방공간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 분단이 아닌 통일된 나라를 위해 싸웠던 역사의 당당한 주체였다. 통일독립 쟁취를 외치며 당시 제주도 26만 인구 중 4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던 1947년의 3.1항쟁과 3.10도민 총파업, 그리고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5.10단선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화시킨 투쟁을 덮어버리는 것은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지금은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억울한 '희생자'로 인정받는 데 그치고 있지만 진정 통일을 맞는다면 단순한 희생자를 넘어 통일의 '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국 더 많은 국민들이 4·3의 진실을 알고 공감할 때 풀릴 수 있다, 그래서 70주년에는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앞서 말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신문도 만들고, 찾아가는 4·3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3일부터 5일에는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20여개 도시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문화제도 연다. 4월 7일에는 제주4·3항쟁 70주년 광화문 국민문화제가 예정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서 문화제에 참여하는 평화버스도 운영한다. 3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4·3특별 전시도 열린다. 누구보다도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 온 평통사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 



# 부산평통사 평화발자국, 제주에서 2단계 사업 첫 발 내딛습니다.

도라지 부산평통사 평화발자국 해설사

전쟁과 분단의 상흔이 있는 곳을 찾아 그 곳의 역사와 교훈을 새기고 평화와 통일의 염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평화올레, 평화발자국. 평화발자국은 단순한 평화기행이 아니라 평통사의 또 하나의 실천영역이다. 이에 사드철회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실현의 길에 평화발자국도 함께 할 것이다.

부산평통사 평화발자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활동을 마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 1단계 활동은 임진왜란부터 부마항쟁까지, 역사의 주인으로 살고자 한 부산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큰 줄기아래 열 네차례 진행했다.

2014년에는 임진왜란에 맞선 부산사람들을 주제로 당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해 왜구와 싸웠던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떼었다.

2015년에는 '일제에 맞선 부산사람들'을 주제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수탈의 중심으로 삼았던 곳들을 찾았으며,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부산 인물들을 찾아보았다. 이 기간의 평화발자국은 일본이 안보법제를 제·개정하여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 의도를 구체화하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취지를 담아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전쟁에 맞서 평화를 일군 부산사람들'을 주제로 6.25 전쟁의 와중에도 정전을 외치고 전쟁의 상처를 서로 싸매주며 평화를 만들어간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나섰다.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고리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이 구조화될 수 있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평화에 대한 절박한 염원을 담아 진행했다.

2017년에는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운 부산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4월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직후, '부마의 함성, 소성리까지'라는 제목을 달고 부산민주항쟁이 시작된 부산대에서 출발하여 유신의 적폐를 실감하는 박정희 생가를 거쳐 소성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10월에는 6월항쟁의 마중물이 된 부산 민주항쟁의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을 진행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자주와 평화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미국 앞에 보다 당당해야 하며, 민중의 힘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점을 새겼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2단계 활동은 '부산을 비핵평화의 도시로'라는 주제 하에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되고 있는 현황을 짚어보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부산의 위상을 확인하고 비핵평화도시 부산에 대한 전망을 시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다.

일제하 부산 및 경남지역에 구축되었던 군사기지 탐방으로부터 현재 부산에 존재하고 있는 55보





급창, 8부두, 백운포, 김해공항 등 미군기지들을 돌아볼 것이다. 아울러 평택, 군산, 제주 등 국내의 미군기지도 돌아보려 한다. 나아가 해외의 '평화의 향'을 만든 사례를 조사하고 직접 찾아보면서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해보려는 담대한 계획도 세웠다.

그 첫 여정을, 4·3항쟁 70년을 맞는 제주로 정하고 3월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추진한다. 전쟁역사평화박물관에서 일제하 군사기지 제주도의 역사를, 4·3평화공원에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아래 자행된 학살의 현장을, 그리고 강정해군기지와 제2 공항 추진 현장을 찾아 제주의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자 한다.

전쟁역사평화박물관은 일제 때 진지 구축을 위해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이성찬 용(1921년 생)의 증언에 따라 그의 아들인 이영근 씨가 발굴하고 보존한 현장이다. 이 가마오름 동굴진지는 제주도 일제 군사유적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대표적 공간으로서 일제가 초래한 인권 유린과 침략 전쟁의 만행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이곳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전쟁 준비 상황은 물론 과거의 참혹한 전쟁역사를 현재와 연결하는 통로로서 전쟁과 침략의 비참함,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장소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의도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질 것이다.

4·3평화공원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아래 자행된 제주도민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곳이다. 우리는 3월 31일 개최되는 4·3 항쟁 70주년 행사에 참가하여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자 한다.

강정해군기지와 제2공항 추진 현장은 제주에서 벌어진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제주에 강정해군기지와 더불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된다면 제주는 전쟁기지가 된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앞 100배에 동참하고 신공항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주민들을 뵈고 올 것이다. 제주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단, 남북미 대결의 한 부분이다.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자주적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가득 안고 내딛는 부산평통사의 2단계 평화발자국, 응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 1990년대 초 팀스피릿 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선순환을 돌아본다.

이기훈 청년회원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한반도를 위협했던 긴장과 대결의 구름도 기분 좋은 봄바람에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대화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전될지 아니면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갈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원하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앞날을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체로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여정에 나서야 하는가.

사람의 모든 판단은 경험에 기초한다. 무의식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속성인 것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한반도문제도 그런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가능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럼 이제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90년대 북미 관계는 영변 핵시설의 사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북한은 1985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의무사항이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사찰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에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팀스피릿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증대되어 “담보협정을 체결할래야 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통일뉴스, 2003. 01. 22)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고조되던 긴장은 한 차례 전환기를 맞이한다. 한·미가 1991년 12월, 북한에게 핵안전협정 서명과 상호 시범사찰의 수락 의사를 밝히는 조건으로 다음해 봄에 예정되어있던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사찰을 받겠다”고 발표하였다.(한겨레, 2018. 01. 05)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이뤄진다면 팀스피릿 훈련은 한국을 방어하는 전략개념에 그치지 않고 전장을 북한 전역까지 확대시키고 핵무기 사용전략을 도입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대규모 기동훈련이었다. 이런 ‘현실위협’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비해 전향적인 것으로 북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한·미의 이런 행동변화는 국제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90년대 당시 남한의 노태우 정권은 이른바 ‘북방정책’으로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에 나섰으며 북한도 경제적,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일본과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일수교와 북미수교는 이뤄지지 못 했

지만 한·미는 긴장완화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수용의사를 표명한 이후 상황전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미국의 정책변화로 남한에서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다음 노태우 정권은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이른바 ‘핵부재선언’을 발표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 간의 의미 있는 합의로 이어지는데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그것이다. 1992년 2월 공식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조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상황이 진전되자 한·미는 약속한대로 1992년 팀스피릿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드디어 대결과 긴장이 해소되는구나 하는 기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미국은 북한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한·미 국방부장관은 이를 명분으로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하였고 실제로 팀스피릿 훈련이 재개되자 북한은 NPT 탈퇴와 핵안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로써 북미관계는 다시 대결과 불신, 그 평행선의 궤도에 오르고 만다.

물론 지금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사문화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함의하는 바는 북미관계는 한 쪽의 일방적인 조치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북미관계는 뿌리 깊은 불신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북미간의 갈등은

자신들의 이해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한 탓에 반복되고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 위에서 생각해볼 때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팀스피릿 훈련 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선순환’과 같이 서로가 동시에 행동에 나서지 않고서는 불신의 덩어리만 더욱 커질 뿐 진정한 문제해결의 문턱에는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한미의 공세적인 군사연습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딜레마’도 쌍(雙)중단의 방법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며 소 쌍중단이 실현되고, 이어 북한이 대북특사를 통해 “대화기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을 하고 한미도 4월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기간을 축소해 진행함으로써 중 쌍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쌍중단의 가능성과 합리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연합연습과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과 그러한 ‘선순환’을 바탕으로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북미 당국에 온 힘을 다해 촉구해야만 한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좋은, 싫든 역사가 주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나는 그것이 평화의 촛불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치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 ♡ 광주

3월 3일 평통사 운영위원 총회와 2018년 사업을 계획 하면서 1월 15일, 1월 20일에 이어 2월 24일 '평통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북미간 핵 대결의 현주소 핵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의 정당성과 절박성에 대해 정리하고 결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차례 장시간에 걸친 교육과 간담회에 열의있게 참여, 동참해 주신 운영위원들께서 감사드립니다.



2월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를 한 달여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희준 운영위원 담당 하에 평일 낮에 진행되는 조건임에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광주평통사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번개모임을 진행했습니다. 3월 5일 광주평통사 운영위원회 진행 이후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축하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뜻깊게 가졌습니다. 최근 정세의 반영이라도 하듯이 그 동안의 그 어떤 자리보다 밝고 재미있고 의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이자 3.24!!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 정동석 |

## ♡ 군산

한미군사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중단 촉구 일인시위 이여가



유엔 총회에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과 그 전후 7일 동안 한반도에서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한반도에서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군사연습과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월)부터 3월 23일(금)까지 군산 롯데마트 기업은행 사거리 등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눈길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시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파이팅!" 하고 격려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박운옥 김태순 신범철 조영환 문규옥 김태철 최소영 박영희 서동완 권현숙 김판태 등 여러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1인시위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시위의 열기를 3.24 광화문 촛불로 모어나갈 것입니다.

### 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촉구 투쟁에 연대!

지난 2월 15일 한국지엠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알려지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군산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지엠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수막 부착 지엠경영자 고발 집회참가 등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평통사에서 지난 2월 27일에는 2천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군산시민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이와 같은 연대활동에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판태 |

### ♥ 나주

### 평화를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를 모아 남북미 당국에게 밝히는 평화촛불!



1월 26일 창립총회 이후 나주시민들에게 평통사를 알리고 평통사의 내용을 공유 동참할 수 있도록 1인 선전활동을 매주 전개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오후 6시~7시 남교문 앞에서는 이정훈 대표, 조성환 회원, 이현영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3월 5일 오후 6시~7시 농민회사무실 사거리에서는 안보현 회원, 양이화 회원의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3월 19일은 나주평통사 전 회원 집종의 날입니다. 선전활동 후 공부모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주에서도 평화의 염원 담아 평화의 봄바람을 함께 일으킵시다.

| 양이화 |

### ♥ 대구



2018년 3월 3일(토) 제 24차 평통사 중앙 총회에는 대구 회원 17명이 참여했고, 사드저지 투쟁을 열심히 한 공로로 모범지역 상을 받았습니다. 사드 저지 투쟁 중인 노곡리 이장과 김천 회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발언도 했습니다.



총회 참석후 스타케미칼 동지들의 굴뚝농성을 지지 방문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진밭교 피켓팅하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님, 소성리 진밭교 새벽 지킴이와 매주 일요일 마을 지킴이 활동하는 대구 회원들, 사드저지 투쟁을 두박두박 하고 있습니다.

| 이미경 |

## ♥ 대전

### 한미연합연습/북핵미사일실험 동시중단 촉구 1인시위 진행중



2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7주간에 걸쳐 대전역 등지에서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실험 동시중단 촉구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이전의 한미연합중단 촉구나 사드철회 1인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유심히 피켓을 보기도 하고 소수의 시민들은 반대 또는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어떤 시민은 수고한다면서 간식거리를 사서 건네기도 합니다.

| 유영재 |

## ♥ 목포

### 고영대 대표 평화특강 진행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실현-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남북한의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의 분위기로 인하여 한반도 내에 평화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월 11일에 평통사 목포모임이 목포 대성동성당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고영대 공동

대표의 평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남북, 북미 대화의 분위기 때문인지 대성동 성당의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150여명이 참여하여 특강을 경청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주제는 평통사의 핵심 이슈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쉬운 주제는 아니어서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고영대 대표가 쉽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 듣는 분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모인 청중들이 모두 이해를 잘 했고 많이 공감을 하는 특강이었습니다.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평화협정의 의미와 그 근거, 이에 대한 노력과 중단에 대한 이해에 큰 보탬이 되었고 청중들이 그간 잘못 알고 있었던 한미군사동맹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핵 대결이 가지는 위험성과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 박상준 |

## ♥ 성남용인



2월 9일 동시중단 평화행동을 시작해 3월 8일 현재 까지 18회의 1인시위를 야탑역광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일은 주민교회 통일강연회에서, 2일은 성남여성대회 Me too, with you 집회장, 4일은 정월대보름달 집축제장을 찾아가 홍보하며 3/24 촛불집회 참여해 달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3월부터 매월 회원공부모임을 마지막 금요일 가질 계획입니다.

| 서덕석 |

## ♥ 부산

### 동시중단 지속 촉구 릴레이 1인시위



2월 9일 시작한 서면 지하상가 1인시위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인시위에서는 3월 24일 서울 광화문 평화촛불 동참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동시중단과 동시병행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평통사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회원 정책간담회



2월 25일 회원들이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병행에 대한 평통사 방침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데 공감하고 3월 24일 광화문 촛불에 적극 참가하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 분석과 대안 세미나



3월 6일 정의당, 노동당, 변혁당과 부경울열사회, 대안문화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박석분 상임운영위원은 북미 핵대결의 현황과 정세의 요구,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핵 억제론의 문제, 향후 전망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평통사의 정책적 대안들을 지역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연대의 폭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내겠습니다.

| 김건우 |

## ♥ 부천



전국의 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함께 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사이에 북미사이에 기쁜 소식들이 있네요. 3월 24일 평화의 촛불을 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쉴수록 저금통을 언제 했었나 싶게 오래되었는데 잊지 않고 1년에 한번씩 모아서 보내주는 회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정숙 |

♥ 서울

3.24 평화촛불에서 만나요~



평통사가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주제로 하는 3.24 평화촛불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제로 북미 사이의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3.24 평화촛불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는 3.24 평화촛불 성사를 위한 집회가 있었고, 미대사관 앞 1인시위에서는 3.24 평화촛불 참가를 호소하는 유인물도 시민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숲나>에서 평화촛불 강의



황윤미 대표가 대안학교인 <숲나학교>에서 3.24 평화촛불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에 다소 어려워하는 듯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3.24 평화촛불에 적극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 황윤미 |

♥ 인천

평창의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로! 인천지역 릴레이 1인시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쌍중단(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핵미사일실험 중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당국은 4월부터 다시 한미군사연습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원들과 함께 쌍중단을 지속하여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피켓을 유심히 쳐다보고는 커피를 사다주며 “수고하신다” 거나 “결국 대화하자는 거죠?” 하며 엄지를 척 치켜들고 지나갔습니다. 피켓을 사진으로 찍어가는 학생이나 유인물을 앞뒤로 꼼꼼히 살펴보는 등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월 23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와 3월 24일 토요일 6시 광화문에서 한반도 평화촛불에 회원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우성 |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서울남부평통사**

연 락 처 : 010-9780-7139 형복순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회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대전충청평통사**

주 소 : 34623 대전 동구 대전로867번길 한밭오피스텔 901호  
계좌번호 : 하나은행 647-910051-38305 유영재  
연 락 처 : 042) 635-5812 dcspark925@hanmail.net

**보령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 351-0995-3651-23 김영석(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수구 전릉로 38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506-01-323911 이승희  
연 락 처 : 010-8283-4371 국산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계좌번호 : 광주은행 169-107-165626 정동석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3022-0452 서광석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안동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733-02-360613 김현택  
연 락 처 : 010-4312-3939 조한웅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계좌번호 : 대구은행 076-13-161229 대구평통사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계좌번호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연 락 처 : 070-7809-4311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계좌번호 : 농협 351-0959-1481-63 서덕석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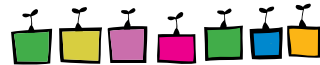
**해남 010-5612-8125 박승규**

**무안 010-3645-2722 문영란**

**김제 010-9957-7478 손은하**

**목포 010-5610-5230 정동석**

**마산창원진해 010-2674-8510 김용환**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서창호 이일영 임종철 이천우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욱

**발행일** 2018년 3월 21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 3.24 평화촛불 추진위원회

324peaceaction@hanmail.net

02-711-7292, 02-778-4001

국민은행 011202-04-219026 오혜란(324평화촛불)



소중한 대화의 동력을 이어 평화 실현의 기회를 살릴 **시민 행동이 절실합니다.**  
**핵 대결과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염원을 모아냅시다.

# 3.24 평화촛불

**(토)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상 앞)**

청(소)년 울동, 풍물, 300인 평화대합창, 종교/시민 발언, 평화세대 발언  
남북미에 보내는 메시지, 대시민 호소, 행진 등

**3.6 남북 합의, 북미 정상회담 합의 환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한미군사연습, 북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

**5시부터**

**사전행사** \_청년 플래시몹, 풍물·평화 퍼레이드